

서울혁신센터

사회혁신 리서치랩

월간보고서

4
월

이 달의 키워드

관계를 기반으로 한 혁신이 필요하다

사회혁신의 시선

1호 린 방법론(Lean Method), 사회혁신에 적용가능한가?

사회혁신 포커스

8호 여야 총선 청년공약 이대로 괜찮은가, 서울시에 응답하라!

9호 기업 맞춤형 대학 구조 조정에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대학 혁신으로

10호 혁신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 '멍청한 주인'이 문제

11호 주차문제 해결, '주차장 공유'로 가능한가?

사회혁신과 사람

5호 에너지위기 시대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 "삶의 패러다임 전환이 곧 혁신이다."

CONTENTS

02	이 달의 키워드	관계를 기반으로 한 혁신이 필요하다.
03	사회혁신의 시선	린 방법론(Lean Method), 사회혁신에 적용가능한가?
10	사회혁신포커스 (08)	여야 총선 청년공약 이대로 괜찮은가, 서울시에 응답하라!
15	사회혁신포커스 (09)	기업 맞춤형 대학 구조 조정에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대학 혁신으로
19	사회혁신포커스 (10)	혁신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 '멍청한 주인'이 문제
23	사회혁신포커스 (11)	주차문제 해결, '주차장 공유'로 가능한가?
28	사회혁신과 사람 (05)	에너지위기 시대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 "삶의 패러다임 전환이 곧 혁신이다."
	4월의 행사	

이 달의 키워드

관계를 기반으로 한 혁신이 필요하다.

김병권 사회혁신리서치랩 소장

4월 27일 사회혁신 리서치랩은 ‘프리랜서들의 권리와 외침’이라는 세 번째 공개워크숍을 열고 4월 외부행사를 마감했습니다. 기술혁신을 맨 앞에서 이끄는 첨단 산업분야인 IT,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용과 소득이 지독히 불안정한 ‘프리랜서 노동자 혹은 개인사업자’였다는 것이 워크숍에서 나온 화두중의 하나였습니다.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대의 추세는 점점 더 우리 삶을 안정되고 편안하게 하기는 방향이 아니라 불안정과 고위험으로 끌고 가는 것일까요?

사회는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신뢰에 기초하여 의지하면서 안정적인 삶의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많은 사회적 문제와 이슈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안정적인 관계의 해체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업과 노동자, 대학과 학생은 물론이고 각 세대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많은 관계 지향적 (relationship-oriented)인 사회관계들이 단기적인 거래 지향적 (transactions-oriented) 관계로 대체되면서 문제가 발생해 온 것이 아닐까요?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 기업, 국가와의 관계로부터 떨어져 나온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관계에 의해 얻어야 할 필요를 시장에

서 계약을 통한 거래로 해결(구매)하려 하지만 그것이 실패하면서 상당한 사회적 문제들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거래에서는 돈이 없으면 전혀 평등하지도 자유롭지도 않은 냉정한 메커니즘 때문이지요.

관계의 중요성은 직장이나 풀뿌리 공동체 뿐 아니라 국가와 시민들의 사이에서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일부에서 영국 등 일부에서 제안되었던 관계국가론(relational state)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시장 실패를 대신하여 다시 국가가 거대한 공공서비스의 공급자로 되돌아가기 보다는, 시민의 참여에 의한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보건, 교육, 환경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해결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국가론의 요지입니다.

즉, 국가와 시민사회의 긴밀한 관계형성이 필요하며 국가는 정부와 시장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적 공간을 형성해주고 여기에서 시민사회의 능동적 역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의 문제를 해결한다. 특히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로 많은 권한을 분산시키고 지자체가 지역의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결합하여 공공서비스를 운용하자는 것이지요.

사회혁신 리서치랩이 4월에 선보였던 네 편의 사회혁신 포커스, 한편의 사회혁신과 사람, 열린 세미나와 워크숍 ‘사회혁신의 발견’안에는 모두 사회적 자본이라고 표현되는 신뢰 관계의 회복이라는 맥락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월간보고서를 함께 공유하면서 아울러 관계에 대한 고민을 역시 함께 공유하고 싶어 문제를 던져 보았습니다.

사회혁신의 시선

린 방법론(Lean Method), 사회혁신에 적용가능한가?

김병권 사회혁신리서치랩 소장

도요타의 제조 방법론을 미국의 혁신적 기업가 에릭 리스(Eric Ries)가 실리콘밸리의 창업 방법론으로 진화시켜서 적용한 것이 린 스타트업(Lean Startup) 방법론이다. 린 방법론은 혁신적인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전통적인 폭포수 모델(Waterfall Model)인 계획수립 - 설계 - 실행 - 평가의 단계적 절차를 따르며 안 된다고 조언한다. 대신에 '구현하고 측정하고 학습하는(build - measure-learn)' 피드백 루프를 통해 실패를 조기에 찾아내고 고객과 대화를 하며 해법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제안한다.

그러면 과연 이런 방식이 사회혁신의 경우에도 잘 작동할 수 있을까? 피터 머레이와 스티브 마(Peter Murray & Steve Ma)는 2010년부터 개발도상국에 디지털 책을 공급해온 비영리 기구 월드드리더(World Reader)를 사례로 제시한다. 불과 5년 만에 놀라운 성과를 거둔 핵심 이유는 린 방법론을 채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혁신은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비즈니스 영역 이외에도 운동(movement)과 정책(policy)에 이르기까지 넓게 걸쳐있다. 따라서 린 방법론이 비즈니스에 국한하여 볼 때에는 어느 정도 유용하더라도 운동이나 특히 정책에 이르기까지 쉽게 적용할 수 있는지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 사회 환경은 기술환경이나 기업환경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중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린 방법론이든 사회혁신 방법론이든 모두가 초기과정에서부터 시민, 또는 사용자와 긴밀히 접촉하고 그들의 반응을 통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사회혁신가로 공인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모토를 내걸었던 것은 이런 맥락에서 수긍할 수 있다.

1. 불확실성과 사회혁신 방법론

사회혁신을 포함한 모든 혁신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혁신은 "알려지지 않은 것, 불확실하고 측정하기 어려운 것에 대한 탐구를 강조한다. 완전한 정보를 가진 완전 시장에서는 혁신적 기업가를 위한 여지가 없다."¹⁾ 특히 선형적인 진화 보다는 '돌연변이'에 가까운 양상을 포착하려는 사회혁신의 관점은, 일정한 변동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균형과 안정으로 수렴하는 것을 가정하는 균형이론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미래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때문에 정

교한 계획을 세워서 실패를 피하려는 노력이 무의미해질 수 있고, 차라리 일찍 실패를 경험하고 거기에서부터 미래를 풀어갈 단서를 찾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은 사회혁신에 국한되지 않는다. “세상에 없던 소프트웨어를 창조함과 동시에 경쟁사보다 더 빠르게 구축해야 한다는 속도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불확실성이 다분하여 예측불가의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소프트웨어 개발 역시 매우 유사한 환경에 직면한다.²⁾ 당연히 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도 여기에 적응하면서 발전되어 왔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애자일(agile) 개발 방법론이다.

디자인적 사고(Design Thinking)를 제창하여 널리 알려진 디자인 기업 IDEO의 팀 브라운(Tim Brown)은, “불확실한 속성들이야말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무력무력 샘솟는 창조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면 그것을 찾아나서는 일은 큰 의미가 없지 않은가?” 라며 불확실성이야말로 혁신의 자양분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기업가 정신에 관한 전문 컨설턴트인 나단 퍼(Nathan Furr)의 경우, “혁신은 불확실성에 관한 것이고 표준적이지 않은 과정에 관한 것”이라고 명확히 정의하기도 한다.³⁾

이처럼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혁신적 기업 활동 등 영역은 다르지만 모두 불확실성을 기본적인 환경요인으로 전제하면서 사업 계획을 짜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론들은 한결같이 ‘혁신’을 기본가치로 내세우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와 같이 불확실성과 혁신은 그 영역은 달라도 항상 짝

을 이루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술의 미래나 기업의 전망과 달리 사회변화의 진로에 관한 불확실성은 훨씬 복잡하다. 따라서 사회혁신이 직면한 환경의 불확실성은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창업 기업 관리보다 통상적으로 더욱 어려운 도전과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혁신을 성공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방법론은, 앞서 언급된 불확실한 환경에서 정립된 창조적인 소프트웨어개발 방법론, 혁신적인 디자인적 사고, 그리고 높은 실패의 위험성을 무릅쓴 스타트업 방법론들과 근본적으로 유사한 방법론적 틀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특히 혁신적 스타트업 관리방법론으로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린 스타트업(Lean Startup) 방법론이 사회혁신을 풀어나가는 방법론으로서 가능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 실제로 이를 적용해보고자 한다. 즉, 영리 비영리를 막론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혁신을 수행하는데 있어 기업조직의 관리 방법론인 린 스타트업 방식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린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디자인 사고, 애자일 방법론 등을 관통하는 핵심맥락을 살펴보고 이것이 사회혁신의 맥락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2. 린 방법론(Lean Method)의 특징과 사회혁신영역에의 적용

린(lean)이라는 어휘는 원래 ‘기름기가 없는’, ‘간결한’ 등의 뜻으로서, 부품 재고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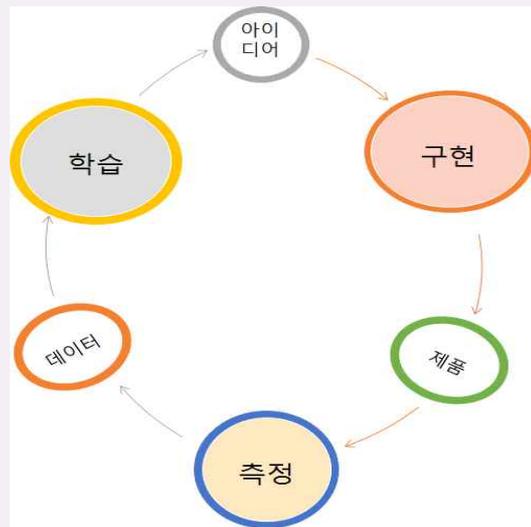
잔뜩 쌓아두지 않고 주문에 맞춰 부품을 신속히 조달하고 자동차를 조립했던 일본 기업 도요타의 생산방식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적기 생산(Just-In-Time), 재고통제, 빠른 생산 순환을 자동차 제조의 경쟁력으로 내세운 도요타가 미국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빅3(GM, 포드, 클라이슬러)를 제치고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되면서 린 제조(Lean Manufacturing) 방법론도 덩달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도요타의 제조 방법론을 미국이 혁신적 기업가 에릭 리스(Eric Ries)가 실리콘 밸리의 창업 방법론으로 적용하여 만들어 낸 것이 바로 린 스타트업(Lean Startup) 방법론이다.

린 방법론은 단순히 “계획만 세우지 말고 먼저 실행해 보라”는 따위의 권고와는 차원이 다르다. 오히려 린 방법론은 새로운 혁신적인 기업을 만들 때에도 반드시 관리(management)가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한다. 다만 극도의 불확실성(extreme uncertainty)이라는 맥락에서 작동하는 관리 방법론이 필요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혁신적인 관리론(entrepreneurial management)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혁신은 상향식이며 분권화되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⁴⁾

린 방법론은 혁신적인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전통적인 폭포수 모델(Waterfall Model)인 계획수립 → 설계 → 실행 → 평가라고 하는 방법론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대신에 ‘구현하고 측정하고 학습하는(build - measure-learn)’ 피드백 루프를 통하여 실패를 조기에 찾아내고 고객과 대화를 하

며 해법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제안한다(그림 1 참조). 그 과정의 반복을 통해 초기의 실패요인들을 걸러내고 사용자의 관점에서 검증된 해법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한다.

「그림 1」 ‘구현-측정-학습의 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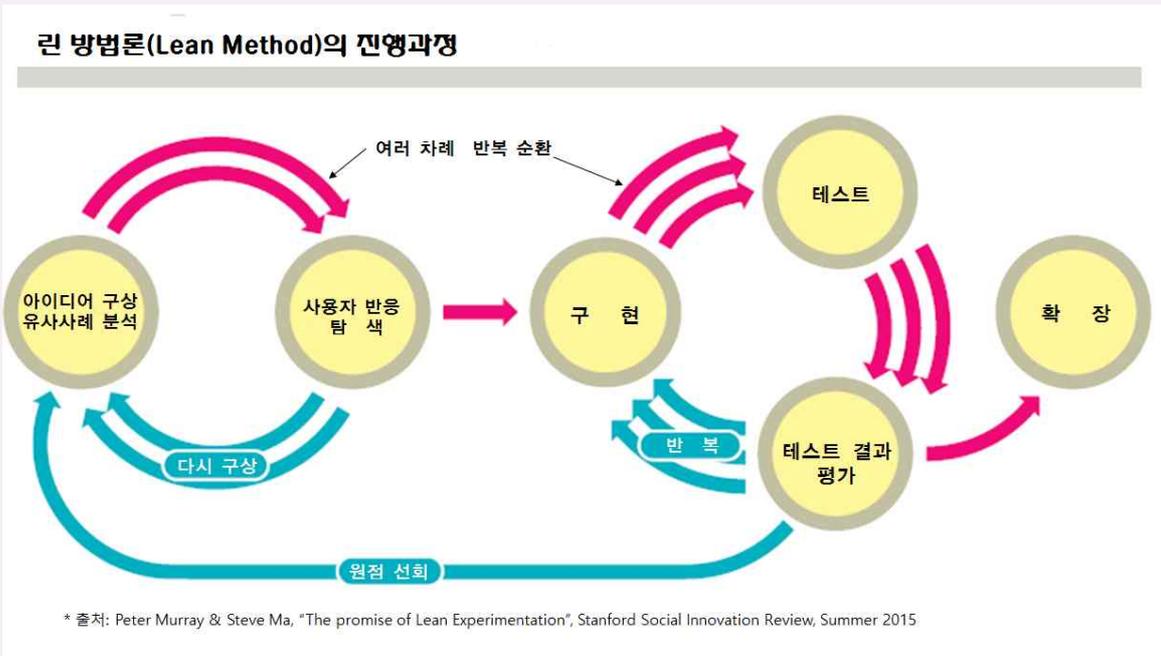


출처: Eric Ries(2014)

그 결과 만약 최초의 아이디어가 본원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원점으로 선회하고, 반대로 성공적으로 평가되었으면 이를 시제품 수준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순환과정을 통해서 비현실적이고 장황한 계획이 낳을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 전에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프로토타입을 통해 사용자 반응을 확인하면서 혁신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를 현실화시킬 수 있다. 이때의 프로토타입을 최소한의 실제적 제품(Minimum Viable Product; MVP)이라고 부른다(그림 2 참조).

그렇다면 과연 이런 방식이 사회혁신에도 잘 적용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피터 머레이와 스티브 마(Peter Murray & Steve Ma)는 스탠포드 사회혁신 리뷰(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에 기고한 글

「그림 2」 린 방법론의 일반적인 절차 모형



에서 월드리더(World Reader)의 사례를 보여주며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비영리 조직들도 관행적으로 작업계획을 먼저 세우고 이사회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며 펀딩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너무 많은 불필요한 노력을 쏟아 붓는다고 한다. 그러나 린 방법론은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개발 과정을 설계하는 대신에, 가장 위험도가 높은 가정(riskiest hypothesis)을 검증해보기 위해 작은 실험을 해볼 것을 권장한다. 월드리더(World Reader)는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을 상대로 모바일을 이용한 책읽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이와 같은 권고를 적용했다.

2010년부터 개발도상국에 디지털 책을 공급해온 비영리 기구 월드리더(World Reader)는 불과 5년 만에 54개 나라에 43개 언어로 된 약 15000종의 디지털 책을 공급해왔고 200만 이상의 독자를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이 놀라운 성과를 거둔 핵심 이유는 린 방법론을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이 과연 기본적인 모바일 기기로도 책을 읽을 것인가를 검증하기 위해 앱 개발자들과 아주 단순한 책 목록과 간단한 텍스트 리더만 구현했다. 책표지도 설명도 주석도, 책갈피도 없지만 검증을 하는 데는 충분했다. 실제로 이 정도의 간단한 버전만으로도 수천 명 어린이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런 식으로 검증이 되었을 때 비로소 앱 개발자와 정식개발 계약을 맺고 제품을 개선하기 시작했다.⁵⁾ 린 방법의 적용이 사업성공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3. 불확실성 속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다양한 방법론들

앞서 간단히 언급한 대로 불확실성에 대처하여 해법을 도출하고자 하는 방법론은 린 방법만이 아니다. 사실 린 방법론은 모든

롤라 매니저가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개발한 방법론인 식스 시그마(Six Sigma), 유연하고 반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인 애자일(Agile) 개발 방법론, 그리고 혁신적인 디자인 회사 IDEO의 리더 팀 브라운이 만들어낸 인간중심 디자인 방법론(Design Thinking)과 많은 교집합을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1년에 발표된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선언에 따르면, “공정과 도구보다 개인과 상호작용을, 포괄적인 문서보다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계약 협상보다 고객과의 협력을, 계획을 따르기보다 변화에 적응하기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우선순위가 높은 기능부터 개발을 시작하고, 문서보다는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눈다. 전체를 한 번에 만들려 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일부라도 동작하는 부분을 완성시킨 후, 그것을 고객과 사용자에게 조기에 보여준다. 그렇게 하여 얻은 피드백을 반영하여 소프트웨어를 성장시킨다.”⁶⁾ 조기에 사용자와 대화함으로써 오류를 피하고 반복적으로 제품을 완성시켜나간다는 점에서 린 방법과 유사한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디자인적 사고(Design Thinking)는 제품을 빠르게 개발하여 실패를 미리 잡아낸다는 점에서는 위의 방법론과 궤도를 함께하지만 약간 다른 측면도 있다. “디자인적 사고는 직관적인 능력, 일정한 패턴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감성적인 의미를 전달할 뿐 아니라 기능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이며 특히 이런 차원에서 사용자들과의 ‘공감’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⁷⁾

“우리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느끼는 공통

의 감정을 공감이라고 부른다. 공감이라는 이 귀중한 요소는 디자인적 사고와 학문적 사고를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의 경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을 빌려 세상을 느끼는 것, 다시 말해 공감을 통한 통찰력으로 수놓은 다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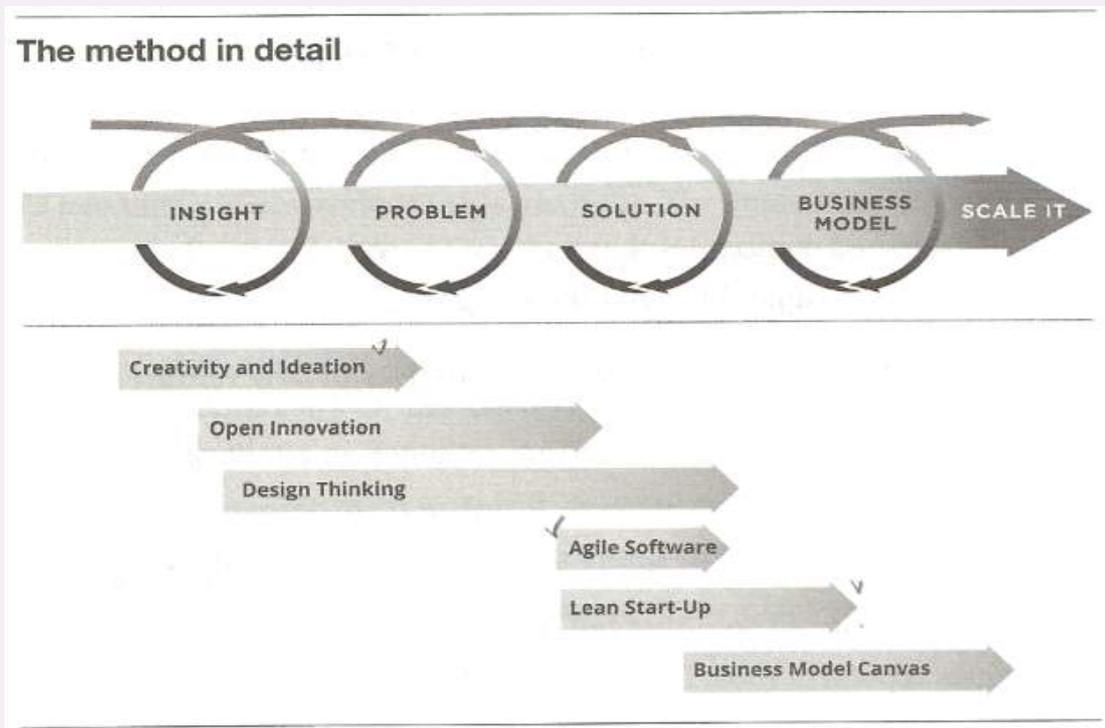
예를 들어 병원에 혁신적인 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환자가 되어 병원 응급실을 직접 체험하여 환자들의 입장이 되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많은 병원들이 “환자들의 편리보다는 병원 직원들의 요구에 맞춰져 디자인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바로 이를 시정하는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디자인적 사고는 “인간이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활용해 체험을 디자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즉, 디자인적 사고는 분석적, 논리적 접근이 아니라 직관적, 감성적 접근으로 사회의 필요나 사람들의 수요를 이해하고, 적극적인 공감능력으로 구체적인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포착해낸다는 점에서 훨씬 섬세한 측면을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들 다양한 방법론들을 통합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완성해 나가는 각 단계마다 적합한 방법론을 적용하는 시도들도 눈에 띄고 있다. 예를 들어 나단 퍼(Nathan Furr) 등은 해법이 완성되는 과정을 ‘아이디어 발견과 통찰(Insight)’ → ‘해결해야 할 문제 정의(problem)’ → ‘해법 프로토타이핑(Solution)’ → ‘비즈니스 모델 구축(Business)’ 과 같이 통시적인 단계로 구분한다(그림 3 참조). 여기에서

린 방법론은 해법을 프로토타이핑 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초기 단계에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다자인적 사고가 훨씬 강력할 수 있다는 식이다.⁹⁾

연구에는 린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 둘째, 매출과 같은 단순한 양적지표가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적 변화와 같은 지표들을 제대로 측정해내기가 어렵다. 셋째, 린은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도구의 의미가 강하며 변화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림 3」 다양한 방법론의 통합 사례



출처: Mathan Furr, Jeff Dyer(2014)

4. 린 방법론 적용의 한계와 과제

그렇다면 린 방법을 사회혁신과정에 적용할 경우 문제점이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없을까? 이 대목에서 피터 머레이와 스티브 마(Peter Murray & Steve Ma)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적한다. 첫째, 유치원 어린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고등학교 졸업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와 같은 장기적 효과를 관찰하는

넷째, 비즈니스에서는 가중되는 경쟁과 빠르게 바뀌는 기술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린 방법론을 선택한다. 새로운 환경에 재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영리에서는 이런 압박이 덜할 수 있기 때문에 린 방법론이 추구하는 빠른 변화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 적용되기 어렵다.¹⁰⁾

하지만 위와 같은 한계점 외에도 더 중대한 문제들이 있다. 우선 사회혁신은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비즈니스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운동(movement)과 정책

(policy)에 이르기까지 넓게 걸쳐있다. 따라서 린 방법이 비즈니스에 국한하여 볼 때에는 어느 정도 유용하더라도 운동이나 특히 정책에 이르기까지 쉽게 적용할 수 있는지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 기술 환경이나 기업환경보다 사회 환경은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중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불평등이라고 하는 지금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만 하더라도 그것이 기술 변화 때문인지, 세계화 때문인지, 혹은 금융화나 규제완화 탓인지, 아니면 그 모든 요소가 개입된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한 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프로토타입을 만든다고 해서 해법이 도출되기 어렵다는 말이다. 좀 더 다차원적인 방법론 설계가 필요할 수 있다. 앞으로 사회혁신분야에서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린 방법을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실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린 방법이나 사회혁신 방법은 공히 불확실성을 예견하면서 초기에 너무 완성된 계획 수립이 오히려 자원낭비라는 태도를 견지한다. 이는 성격상 위험을 회피하려 하고 탐 다운 계획을 선호하는 투자기관이나 행정기관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처음부터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팀 브라운은 “디자인적 사고는 걸잡을 수 없이 속도가 빠르고, 규칙이 없으며 파괴적이다. 그러므로 비효율적인 예산 기준이나 관료적인 보고 절차를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행정이나 투자자들이 혁신적 방법론과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린 방법론의 절차에 대한 수용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이다.

확실한 것은 린 방법이든 사회혁신 방법이

든 모두가 초기과정에서부터 시민, 또는 사용자와 긴밀히 접촉하고 그들의 반응을 통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사회혁신가로 공인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모토를 내걸었던 것은 이런 맥락에서 수긍할 수 있다.

참고문헌

- 1) Hans-Werner Franz, H Josef Hochgerner, Jurgen Howaltdt Editors(2013), Challenge Social Innovation: Potentials for Business, Social Entrepreneurship, Welfare and Civil Society, Springer
- 2) 노나가 이쿠지로, 하라나베 겐지 지음, 이명교 옮김, 2013, 「애자일 개발과 스크럼」, 한빛 미디어
- 3) Mathan Furr, Jeff Dyer, 2014, The Innovator's Method: Bring the Lean Startup into your Organization, Havard Business Review Press
- 4) Eric Ries, 2014, The Lean Startup:How Today's Entrepreneurs Use Continuous Innovation to Create Radically Successful Businesses, Crown Business
- 5) Peter Murray & Steve Ma, 2015, The Promise of Lean Experimentation,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Summer 2015
- 6) 노나가 이쿠지로, 하라나베 겐지 지음(2013)
- 7) 팀 브라운, 고정연 옮김, 2009, 「디자인에 집중하라(Change by Design)」, 김영사
- 8) 팀 브라운(2009)
- 9) Mathan Furr, Jeff Dyer(2014)
- 10) Peter Murray & Steve Ma(2015)

사회혁신포커스

여야 총선 청년공약 이대로 관찰은가, 서울시에 응답하라!

정미나 사회혁신리서치랩 팀장

총선을 2주 앞둔 지금 여야 간 청년정책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모두 청년일자리 ‘창출’을 전면에 내세웠다. 사실 정부여당과 차별성 있는 청년정책은 지난 해 서울시 정책으로 등장했다. 서울시는 취업훈련과 수당을 결합한 사실상 ‘한국형 실업부조’에 가까운 정책을 도입했다. 일자리 창출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일 자리의 질’을 강조한다. 청년들이 당장의 질 나쁜 일자리에 머물지 않으면서도 취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질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는 방식인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정책적 한계는 명확하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 중에서도 ‘선발을 하기 때문에 정책 대상이 소수에 국한되며, 실효성 있는 취업훈련 또한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는 서울시 정책이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 정책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서울시 정책이 본래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취업의지가 있는 청년 누구에게나 취업훈련과 급여가 동시에 제공되는 실업부조의 형태여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정

책으로 도입돼야 한다.

결국 일차적 책임은 중앙 정책을 다루는 정부 여당과 각 정당들에 있다. 정치권이 서울시 정책을 반대한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하고, 찬성한다면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때 전제해야 할 것은, 첫째 지금의 청년은 과거의 청년과 구조적으로 다른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 둘째 청년정책은 시혜성 복지정책이 아닌 인적투자이자 성장을 위한 국가 인프라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21세기형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지금의 청년에게는 직업능력향상과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결합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가 절실하다. 이것이 기반이 될 때 청년 문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총선을 2주 앞둔 지금 여야 간 청년정책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모두 청년일자리 ‘창출’을 전면에 내세웠다. 물론 방식의 차이는 있다. 새누리당은 대기업 ‘규제완화’를 통해, 야당은 공공부문 중심의 ‘의무고용할당’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청년수당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6개월에 60만 원, 국민의당은 차후에 갚는다는 조건으로 6개월에 300만 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취업 성공패키지’나 새롭게 도입하겠다는 ‘청년 내일찾기’ 프로그램 역시 일정 수준의 수당 지급과 취업지원 프로그램까지 있다는 것을 감안해보면, 야당의 청년구직수당은 차별성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왜 '서울시' 청년 정책인가?

사실 정부여당과 차별성 있는 청년정책은 지난해 서울시 정책으로 등장했다. 물론 정부여당은 서울시 정책이 중앙정부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중단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포퓰리즘'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정말 정부 주장대로 '중복'이 문제라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할 이유가 없다. 그 논리대로라면 정부정책 역시 '포퓰리즘'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핵심 문제는 서울시가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수당'까지 결합했다는 것에 있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의 방점은 '당장의 취업률 제고'를 벗어난 적이 없다. 하지만 서울시는 '취업률 제고'뿐만 아니라 보완적 제도로써 '수당' 역시 같이 도입했다. 정부는 최소한의 수당과 현재 청년 수요에 맞지 않는 취업훈련을 통해 빠른 취업만을 목표로 했지만, 서울시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당과 아주 느슨한 방식의 자기 주도형 취업훈련을 도입했다. 여기서 성남시 청년수당과도 차이가 발생한다. 성남시 청년수당은 구직이라는 조건 없이 일정 나이 청년들 모두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기본소득 개념이라면, 서울시 정책은 구직이라는 명확한 지원조건을 전제했다는 측면에서 실업부조의 성격을 갖는다. 즉 성남시는 취업훈련 없는 수당만을, 정부는 당장의 취업을 위한 취업훈련만을 제공했다면, 서울시는 취업훈련과 수당을 결합한 사실상 '한국형 실업부조'에 가까운 정책을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정부와 여야 모두 일자리 창출 그 자체를 목표로

하며, 핵심주체를 기업으로 상정한다. 정부여당은 기업이 스스로 청년을 더 많이 채용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야당은 이를 일부 '강제' 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것이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현재 기업들이 국가에 요구하는 제1의 목표는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는 '해고요건완화'이다. 그런데 갑자기 기업들이 국가로부터 지원금이나 강제를 받는다고 해서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쏟아 내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청년실업 문제에서 일자리의 '양'은 핵심이 아니다.

반면, 서울시 청년정책은 일자리 창출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 그보다는 '일자리의 질'을 강조한다. 청년들이 당장의 질 나쁜 일자리에 머물지 않으면서도 취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질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는 방식인 것이다.

서울시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그러나 서울시의 정책적 한계는 명확하다. 비단 서울시 청년에게만 적용된다는 한계를 넘어, 취업을 원하는 청년 중에서도 '선발'을 한다는 것, 그리고 사실상 실효성 있는 취업훈련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 정책이 본래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취업의지가 있는 청년 누구에게나 취업훈련과 급여가 동시에 제공되는 실업부조의 형태여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으로도 도입돼야 한다.

실업부조는 덴마크나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거론한) 독일 등 대부분 OECD 국가들에 존재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이 기존의 고용이력을 바탕으로 기여에 기반 해 제공되는 급여라면,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포괄되지 않는 (청년) 실업자나 장기실업자 등 취업의지가 있는 구직자 모두에게 취업훈련과 지원금을 최소 1년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취업의지가 있는 누구에게나’ 제공된다는 측면에서 보편복지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노동시장 정책’과도 긴밀히 연결돼 있다. 고용보험이 1차 실업안전망이라면 실업부조는 2차 실업안전망이고, 동시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기도 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서울시의 청년정책은 지방 정부 수준을 넘어서, 국가 전체를 포괄하는 중앙정부 수준의 제도로 도입돼야 한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은 취업의지는 있지만 고용보험에 포괄되지 않아 안정적 구직활동을 하기 어렵고, 당장의 생계를 위해 그 어떤 일자리라도 구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다수의 일자리가 저임금 및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으며, 취업을 포기한 채 구직시장에서 한발 물러나 있는 니트(NEET) 족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서울시 정책, 즉 취업훈련과 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실업부조가 전국적으로 확대·도입될 필요성은 자명하다. 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중앙 정책을 다루는 정부여당과 각 정당들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총선 국면에서도 정치권은 이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그 결과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다른 정책적 대안은 부재한 채, 서울시의 청년정책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

다.

21세기형 인프라 구축, 청년정책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치권이 서울시 정책을 반대한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하고, 찬성한다면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때 전제해야 할 것은, 첫째 지금의 청년은 과거의 청년과 구조적으로 다른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 둘째 청년정책은 시혜성 복지정책이 아닌 인적투자이자 성장을 위한 국가 인프라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첫째, 청년정책은 지금의 청년이 50년 전의 청년과 질적으로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금의 ‘청년문제’는 비단 청년의 시기에 겪을 수 있는 학업, 취업, 결혼 등의 일반적 어려움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화와 산업구조의 변동, 그리고 전통적 가족형태의 해체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등의 변화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리고 그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는 집단이 바로 현 시대의 청년들이다.

무엇보다 고용의 형태가 변했다. 50년 전 청년들은 일찍 취직하여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면서 그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구조 속에 있었다. 저숙련 노동자라도 제조업에 종사하며 안정적인 직장, 노조를 통한 연대, 임금상승 등 경제성장에 따른 이익을 같이 향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청년은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불안정한 노동시장 상황에 처해있다. 이로써 직업의 이동이 잦고, 비전형적인 고용

형태와 불안정한 임금소득에 노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복지제도는 50년 전 청년들에게 적합한 제도이다. 시대는 변했고 고용 형태와 직업 경로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복지제도는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오래한 노동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따라서 빈곤의 위험은, 50년 전 청년들에게는 직장을 잃을 경우 일시적으로 비교적 소수에게 발생했다면,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다수에게 상시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구조적인 고용불안으로 인해 임금소득이 안정적이지 않으며, 이로 인해 연금이나 고용보험 등 핵심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Bonoli 2005). 고용불안이 어느 정도 주어진 상황이라면, 이에 대응하는 복지제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지금 당장 핵심 복지제도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맞게 개혁할 수 없다면, 적어도 현재 청년에게 가장 절실한 제도는 도입해야 한다. 그것 중 하나가 바로 실업부조이다.

둘째, 모든 청년정책은 단순한 복지제도가 아니라 인적투자 정책이다. 실업부조는 전통적인 실업안전망이라는 측면에서는 복지제도일 수 있지만, 고용능력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노동시장정책이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성장을 위해 국가가 구축해야 할 21세기형 인프라이다.

정부가 실업부조를 포함한 노동시장정책에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직기간을 통해 직업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임시직의 비중이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높은 수준인데도, 직업이동이 잦지 않으며 임시직에서 3년 후 정규직 이동가능성이

약 70%에 이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네덜란드보다 유연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노동현실은 정반대이다. 근속년수는 가장 짧고 정규직 전환가능성은 11%에 불과하며, 이는 결국 임금격차의 확대와 높은 수준의 빈곤율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를 가르는 핵심적인 차이 중 하나는 실업부조를 포함한 노동시장 지출 비용이다. OECD 주요 국가들의 GDP 대비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지출을 살펴보면, 덴마크가 약 3.5%, 네덜란드가 약 2.8% 수준이며, 독일은 1.7%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0.57%로 덴마크의 1/7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문제는 노동유연성 그 자체가 아니라,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민들 삶의 양태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제도에 기반을 둔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선제적 복지국가(proactive welfare state) 방식을 통해 유연성은 높지만 불평등 및 양극화는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있다(Blossfeld et al. 2011).

과거 발전주의 시절,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을 위해 도로, 항만 등의 기간산업을 통해 국가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제 우리 정부는 21세기형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실업부조는 바로 청년의 성장을 위해 국가가 구축해야 할 21세기형 인프라이다. 지금의 청년에게는 직업능력향상과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결합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가 절실하다. 이것이 기반이 될 때 청년 문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Blossfeld, Hans-Peter et al. 2011. *Globalized Labour Markets and Social Inequality in*

Europe. NY: Palgrave Macmillan

Bonoli, Guiliano. 2005. The Politics of the new social policies: providing coverage against new social risks in mature welfare states. *Policy & Politics* 33(3): 431-49.

Moel, Nathalie et al. 2012. *Towards a Social Investment Welfare State? : Ideas, Policies and Challenges*. Bristol: The Policy Press

사회혁신포커스

기업 맞춤형 대학 구조 조정에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대학 혁신으로

엄관용 사회혁신리서치랩 연구원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 일명 프라임 사업으로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프라임 사업은 2016년에 2,012억 원이 투입되고, 향후 3년 동안 6천억 원이 투입되는 유래 없는 초대형 대학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을 내세우지만, “정부의 재정적 수단을 통한 친기업적 대학 구조 조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프라임 사업이 말하는 사회수요란 기업수요에 다름 아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취업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인문, 예체능, 사회, 자연계열의 정원을 줄이고 공학계열의 정원을 늘리고 있다. 프라임 사업은 대학 구성원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있으며, 지원 규모 대비 줄속 추진의 문제를 안고 있다.

사회적 수요는 기업의 수요와 맥락이 다르다. 대학은 국가나 기업에 종속성에서 벗어나 사회와 연계될 때 본연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성 구축이 요구된다. 기업 맞춤형 대학 구조조정

이 아니라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대학 혁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이다.

프라임 사업, 친기업적 대학 구조조정으로 대학가 몸살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016년 3월 31일 신청이 마감된 프라임 사업의 후폭풍 때문이다. 프라임 사업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조정 사업으로 정식 명칭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이다. 2016년에 2,012억 원이 투입되고, 향후 3년 동안 6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교육계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의 대학 지원 사업으로 불리고 있다. 사업은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과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이다. 사회수요 선도대학의 경우 8개 학교가 150억 원씩 지원을 받고, 1개 학교는 300억 원을 지원받는다. 예산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몇몇 대학들이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일만한 ‘큰판’이다. 조만간 4월 말이면 승자와 패자의 명암이 엇갈릴 것이다.

프라임 사업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혹은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등을 내세운다(교육부 2015.12, 2~3). 액면 그대로 보면 아주 좋은 말이다. 향후 우리나라 대학이 지향할 바를 간명하게 표현한 어구이다. 그런데 왜 신청한 대학들이 몸살을 앓는 것일까? 정부 지원을 받으면 학내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 본연의 위상을 되찾는 일인데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프라임 사업이 말하는 ‘사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회가 아니다. 프라임 사업이 지칭하는 사회는 기업이다. ‘사회 = 기업’이라는 논리 구조 속에서 사회적 수요란 곧 기업이 원하는 인재 육성을 의미한다. 대학을 기업 인력의 보급창 정도로 치부하는 친기업적 사업의 노골적 추진이 부담스러웠는지, 추진 계획 곳곳에 ‘기업’이 들어설 자리에 ‘사회’가 대신하고 있다. 따라서 프라임 사업은 “정부의 재정적 수단을 통한 친기업적 대학 구조조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구조조정의 방향은 명확하다. 대부분의 대학은 취업경쟁력이 떨어지는 인문, 예체능, 사회, 자연계열의 정원을 줄이고 공학계열의 정원을 늘리는 계획을 제출했을 것이다. 교육부가 “기존 학과의 정원을 축소 또는 폐지하여 산업수요 중심의 학과로 이동하라는” 아주 구체적인 방안을 신청 요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정원이 줄거나 심지어 폐과가 되는 구성원들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반발을 줄이기 위한 정부나 대학의 노력은 사실상 없었다. 교육부는 “대학 현장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으나, 각 대학 총장과 기획처장 간담회 정도를 실시했을 뿐이다. 각 대학들 역시 학생들 몰래 사업을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프라임 사업의 선정평가 지표에는 대학 구성원 간 합의를 평가하는 내용이 있다. 이 지표에 대한 교육부의 공식입장은 “교무회의, 사립대 이사회 등 학내 최고의결기구에서 의결된다면 원칙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본다”는 것이다(한국대학신문 2016.04.08). 대학 구성원 간 합의를 학

내 최고의결기구의 의결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는 비약적 상상력이 놀라울 따름이다.

프라임 사업이 얼마나 즉흥적으로 추진되는지는 그 기간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2015년 12월 29일 프라임 사업의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지난 2016년 3월 31일 프라임 사업 신청이 마감되었다. 오는 4월 말에 프라임 사업 선정 대학이 발표될 예정이다. 세종대는 만화애니메이션과와 산업디자인과를 폐지할 계획이고, 경성대와 신라대는 무용학과를 폐지한다고 한다. 겨우 3개월 만에 학과 폐지가 일사천리로 결정되었다. 이는 누가 봐도 심사숙고의 결과라 보기 어렵다.

각 대학이 적극 추진 중인 프라임 사업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생긴다. 오늘날 기업 환경의 변화 속도를 고려한다면 프라임 사업으로 새롭게 등장할 신규 학과에 대한 수요가 4년 뒤에 유지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신규 학과의 입학생이 졸업하는 4년 뒤에 해당 학과에 대한 기업의 수요는 사라질지 모른다. 배재대학교는 2008년도에 신설한 아펜젤러 국제학부를 2011년에 폐지한 바 있다. 졸업생이 나오기도 전에 신생학부를 폐지해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일어난 것이다(오마이뉴스, 2016.01.30). 이러한 민망한 사태가 프라임 사업으로 새로 생긴 졸속 학과에서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이다. 실제 이번 프라임 사업에 지원한 대학들이 제출한 학과 신설계획을 조사한 결과, 최근 인공지능 열풍을 감안한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IoT)

등 ICT 계열 전공 인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압도적으로 많았다(한국대학신문. 2016.04.08.). 정부 예산에 눈이 먼 대학들이 학생들의 미래를 좌우할 사안에 너무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으로 변화해야

기업 맞춤형 정책을 사회적 수요를 위한 정책으로 포장한 정부의 프라임 사업의 문제점과 별도로 사회적 수요와 대학의 관계를 고민해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대학은 사회적 변화를 선도하거나 적어도 이에 부응하는 자격을 갖추는 것을 요구 받아 왔다. 대학에 몸담고 있는 교수나 연구자들은 사회의 주요 이슈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지식 권력을 부여 받았고, 사회 문제 해석의 권위를 부여 받았다. 그러나 정보의 제공과 접근, 활용이 용이해지면서 지식권력이 민주화되면서 대학의 지적 권위는 하락했다. 대학과 사회의 연계 역시 현저히 줄어들었다. 고급 지식 정보가 대학 이외의 영역에서 쏟아지는 상황에서 대학의 선택은 대체로 사회로부터의 후퇴로 나타났다. 향후 사회적 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대학과 사회의 연계는 더욱 느슨해질 가능성이 높다.

현실이 이렇다면 고등교육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개혁 방안은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프라임 사업을 단순히 반대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 교육 체계의 근본적 재구성이 필요하다. 논쟁의 프레임 자체가 프라임 사업에 대한

찬반으로 갈리는 한 사회적 변화에 부합하는 대학 혁신의 방향성은 찾을 수 없다.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하고 사회로부터 후퇴한 대학은 지금보다 더 사회와 단절된 고립된 섬으로 전락할 수 있다. 대학이 사회와의 연계가 끊어질수록 정부와 기업에의 종속성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프라임 사업은 본질적으로 기업 친화형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선명한 목적을 갖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프라임 사업이 표명하고 있는 “사회수요 선도대학”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사회수요를 기업수요로 축소시켜 다소 자의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정부의 프라임 사업을 반대하는 세력 역시 사회적 수요라는 말에 대체로 둔감하다. 인문, 예체능, 사회, 자연계열의 정원을 줄이고 공학계열의 정원 증설을 ‘돈’으로 압박하는 프라임 사업은 분명 잘못되었다.

그러나 프라임 사업의 진행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대 측의 논리가 자연 긍정되지는 않는다. 반대 측의 주장처럼 프라임 사업은 대학의 학문적 자율성과 다양성을 훼손할 개연성이 높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학사회의 학문적 자율성과 다양성은 어떠한가? 국가와 시장으로부터의 자율성은 약한 반면 정작 사회적 수요에 대해서는 매우 자율적이다. 사회적 필요로부터의 자율성은 사회와 대학의 단절을 의미한다. 학문적 다양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기 어려운 전통적인 학과 체계로 고착되어 있다. 프라임 사업과 관계없이 현재 수준에서도 대학사회는 학문적으로 그리 다양하지 못하다. 그런 면에서 대학은 프라임 사업과 반대의 방향으로 구조조

정 되어야 한다.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성 구축이 요구된다.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 구조 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일까? 기존의 학과 시스템이 과연 시대적 흐름과 관계 없이 보편타당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금단의 영역인가? 사회의 변화 속도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상황에서 대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현재의 교원체계가 과연 적절한가? 물론 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방향성이 고민되어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두 가지 지점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프라임 사업처럼 융·복합학과를 비롯한 학과 몇 개 신설한다고 해서 대학이 사회적 수요를 포괄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학과 체계를 구획하고 있는 장벽의 문턱을 대폭 낮추는 방안, 이상적으로는 학과 체계를 아예 파괴하는 혁신적 발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통적인 학과 체계를 무너뜨리고 학생들이 전공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면서 교육의 최종 소비자인 학생 중심의 대학교육이 가능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는 대학의 혁신을 목적으로 할 때 교수사회에 대한 개혁을 경유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직업의 안전성이 성과의 기본 조건이다.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대체로 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평균적으로 직업의 불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학문적 성과로 이어진다.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학교수가 되면 공부를 하지 않는다. 반면 대학교수가 되고자 하는 박사들은 교수가 될

때까지만 열심히 연구한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대학의 사회적 기여 능력은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사회적 변화에 둔감한 교수사회, 사회로부터 연계가 끊어진 교수사회, 사회적 변화를 읽지 못하는 교수사회의 존재 이유는 별로 없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언제나 그랬지만 이번에도 교육 이슈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미래세대를 위해 기성세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가장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영역 중 하나가 교육 이슈이다. 위기에 처한 대학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부재한 오늘날 총선 현장을 보면 우리 정치의 사회적 민감도가 얼마나 낮은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치문화에서는 사회를 기업과 등치시키는 교육부의 폭력적 언어 해석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통용될 수 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폭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의 폭과 비교할 수 없이 깊고도 넓다. 대학은 기업이 아닌 사회와 연계되어 자기 혁신의 동력을 찾아야 한다. 기업 맞춤형 대학 구조조정이 아니라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대학 혁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이다.

참고자료

- 교육부. 2015.12.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 대학(PRIME) 사업 기본계획”.
- 오마이뉴스. 2016.01.30. “대학 구조조정 of 다른 이름 ‘프라임 사업’”
- 한국대학신문. 2016.04.08. “프라임 사업 후폭풍 시작 ... 벌써부터 ‘책임론’”.

혁신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 ‘멍청한 주인’이 문제

김병권 사회혁신리서치랩 소장

혁신은 단기적으로는 가장 불가능할 것 같은 과제, 그렇지만 가장 필요한 과제에 도전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혁신은 시민들의 필요가 가장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해법으로는 풀기 어려운 심각한 사회적 난제를 풀기위한 도전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직은 혁신의 절박함을 잘 알고 있더라도 이를 선택하지 않는다. 이것은 구성원들의 ‘이기적 선택’의 탓일 수도 있지만 더 크게는 구성원들이 과감하게 혁신적인 방향을 선택하도록 길을 열어주지 못하는 ‘멍청한 주인’ 탓일 수도 있다.

『넛지』의 저자 리처드 탈러(Richard Thaler)는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안한다. “필수요건은 소유주로부터 시작하여 최고 경영진들이 (전통적 방법을 탈피해야 함을 - 인용자) 먼저 분명하게 인식하고, 다음으로 조직에서 일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현명하면서도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도전할 때, 그리고 (특히) 실패했을 때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혁신을 갖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공공연하게 혁신을 거부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매우 드물다. 지금처럼 기술과 사회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시기에는 특히 혁신적 추세를 공공연하게 부인하기는 쉽지 않다. 시대를 역행하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은 자신을 혁신가이거나 최소한 혁신에 매우 개방적인 사람들로 보이기를 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어려워지면 ‘조직혁신’이나 ‘정치혁신’을 약속한다. 지난해 야당이 정당혁신을 내걸고 특별 조직까지 만들면서 1년 이상 혁신 논쟁에 집중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4.13 총선에서 참패한 집권 여당과 정부 역시 당분간 ‘혁신’이라는 어휘를 매우 자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직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된 원유헌 의원이 “새누리당은 변화와 혁신 그리고 소통으로 국민들께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겠다고 약속한 발언이 그 단초일 것이다.

케인스가 지적한 혁신 불가 이유

하지만 ‘혁신’을 하겠다는 수많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혁신이 아니라 기존의 관성으로 회귀하는 사례가 흔하다. 비록 혁신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혁신에 도전하고 투자하기 보다는, 기존에 하던 관행대로 따르는 것이 관료들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주 일반적이고 자연스럽다는 것을 명확히 짚어낸 학자가 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경제학자

케인스다. 그는 비즈니스에서 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왜 그토록 어려운지를 다음과 같이 길게 설명하고 있다.

“투자 기금이 위원회, 이사회, 은행 등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렇지만, 공적 이익을 가장 많이 증진하는 장기투자자가 실제로는 가장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평균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눈에 기이하고 비관습적이며 무모하게 보이게 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장기투자자가 하는 행동의 본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성공을 거둔다면 그것은 단지 그의 무모함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을 확신시켜 줄 뿐이다. 그리고 매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만약 단기적으로 그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에게 그다지 많은 자비가 베풀어지지 않을 것이다. 세속의 지혜는 관습을 거슬러 성공하는 것보다는 관습을 따르다가 실패하는 것이 평판에는 더 낫다고 가르친다.(Worldly wisdom teaches that it is better for reputation to fail conventionally than to succeed unconventionally.)”

케인스는 혁신과 마찬가지로 장기투자 역시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하고 비관습적이며 무모’한 행동으로 취급받는다 고 적시했다. 그리고 많은 경우 혁신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비난을 면하기 어렵지만, 관습을 따르다가 실패하면 평판이 크게 깎이지 않는 것이 세상의 분위기임을 예리하게 지적한다. 행정 관료뿐 아니라 금융 투자자, 기업가, 직원들을 막론하고 장기적 기대를 전망하면서 혁신적 활동에 뛰어들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

감독들이 합리적인 선수지명에 실패하는 이유

사람들이 조직 안에서 기존의 방식이나 틀을 벗어나는 결정을 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를 행동경제학의 관점에서 분석한 학자가 『넛지(Nudge)』로 우리에게 유명한 리처드 탈러(Richard H. Thaler)다. 그는 미국 미식축구 리그에서 매년 시행하는 드래프트 과정을 분석하면서 감독들이 저지르는 중요한 실수를 발견한다. 대부분의 각 구단 감독들은 많은 후순위 지명권을 포기하더라도, 또한 다음해의 선순위 지명을 포기하더라도, 당장 올해 순위가 높은 선수를 지명하려고 했다. 그것도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무리하게 선순위 지명권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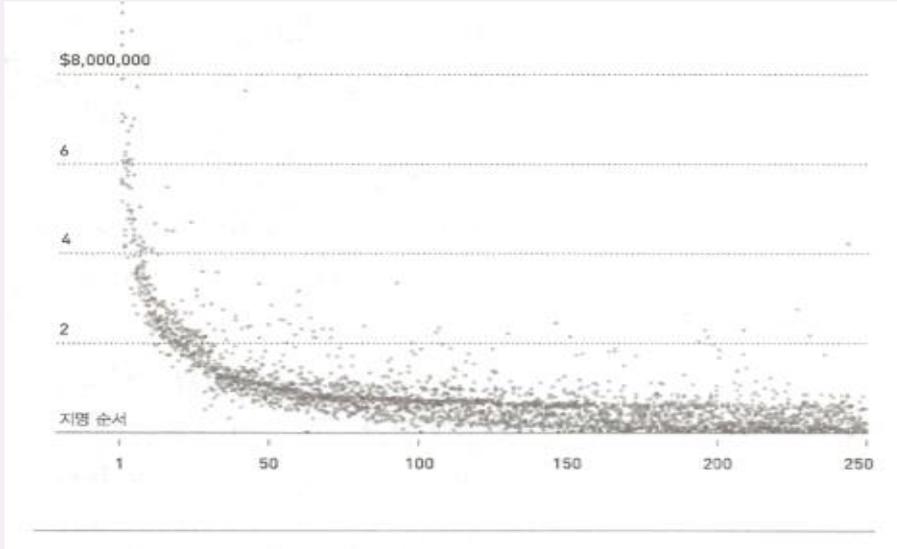
그 결과 첫 번째로 지명 받은 선수는 30번째로 지명 받은 선수보다 평균 다섯 배가 많은 연봉을 받을 정도로 연봉격차가 가파르게 벌어지게 된다(그림 1 참조). 하지만 “실제 전체 드래프트에 걸쳐, 앞서 지명된 선수가 바로 뒤에 지명된 선수보다 더 좋은 실적을 거둘 확률은 고작 52%에 불과”하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었다.

탈러는 “선순위 지명권을 확보한 팀들은 이를 양도하고, 대신 여러 명의 후순위 지명권을 갖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것이 팀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결론짓고 실제로 프로 축구 감독들에게 조언을 해준다. 그런데 감독들은 그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과거에 하던 대로 선순위 지명권을 무리하게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한 탈러의 간단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감독들은 기존 방식 그대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야 나중에

구단주로부터 질책을 받을 위험이 낮기 때문이다.”

‘대리인’들이 전체 기업의 이익보다는 (투자손실로 인해 해고를 당할 위험을 회피하

그림 1 :드래프트 순서에 따른 평균 보수(출처: 리처드 탈러 2015)



'멍청한 주인(Dumb Principal)'

그렇다면 이 같은 잘못된 행동을 바꾸기 위한 해법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탈러는 또 다른 사례를 들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유도한다. 그는 기업 CEO와 임원들 23명이 참여한 모임에서, “50% 가능성으로 200만 달러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반대로 100만 달러 손실이 날 수도 있는 투자 기회가 23명 모두에게 각각 왔다면” 어떤 선택을 할지 물었다. 그런데 23명의 임원 가운데 겨우 세 명만이 투자를 하겠다고 응답했다. 물론 CEO는 23개 전부에 투자하겠다고 대답했다.

당연히 전체로 보아 각 투자 기회는 동일한 절반의 승률을 가지고 있고, 성공할 경우 보수가 실패할 경우 손실보다 두 배가 크기 때문에 23개의 기회에 모두에 투자하는 것이 회사로 보아 이익이므로 CEO의 판단이 옳다. 이렇게 볼 때 기업 임원들이라는

려는) 자신들의 ‘협소한 이익’을 추구한 결과, 조직 전체의 공동 이익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주인의 의지대로 행동하지 않고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좇게 된다는 전통적인 조직 이론의 주인-대리인 문제에 해당하는 사례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탈러는 기업 임원들의 ‘근시안적인 손실 회피’ 측면 보다는 기업 CEO인 주인의 문제에 초점을 둔다. 즉 “조직의 관리자들이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비록 그 결과가 나중에 손실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의사결정 당시에 가용했던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판단을 할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지 못한 주인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이를 ‘멍청한 주인(Dumb principal)’의 문제라고 정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중요한 문제는 대리인들이 불합리한 선택을 내리는 상황에서 실제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주인

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인의 잘못된 행동이란 대리인들이 기꺼이 합리적인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고, 그리고 위험 감수가 수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구축하는 데 실패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혁신적 도전이면 실패하더라도 보상하라?

요약하면 이렇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기에 혁신은 모두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개념이다. 상황이 어려우면 그만큼 혁신은 절박하게 다가온다. 하지만 혁신은 매우 불확실한 미래를 예견하고 있고 높은 위험성을 무릅써야 한다. 혁신은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경우라도 단기적으로 성과가 금방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거나 실패할 확률이 높다. 또한 혁신을 위해서는 관례적인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실험해야 한다. 관습대로 한다면 그것은 이미 혁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조직 구성원들은 혁신의 절박함을 잘 알고 있더라도 혁신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것은 구성원들의 ‘이기적 선택’의 탓일 수도 있지만 더 크게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과감하게 혁신적인 방향을 선택하도록 길을 열어주지 못하는 ‘멍청한 주인’ 탓일 수도 있다. 특히 사람들은 이른바 현재 편향(present bias)이 있다. 케인스는 “인간의 본성은 결과를 빨리 보기를 원하고, 돈을 빨리 벌고자 하는 특이한 열정도 존재하며, 보통 사람은 몇 훗날의 이득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면서 현재 편향을 명확히 지적한다. 문제는 주인이 현재의 단기성과에 급급하

면 대리인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혁신적인 도전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탈러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필수 요건은 소유주로부터 시작하여 최고 경영진들이 (전통적 방법을 탈피해야 함을 -인용자) 먼저 분명하게 인식하고, 다음으로 조직에서 일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현명하면서도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도전할 때, 그리고 (특히!) 실패했을 때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혁신이 지체되는 것도, 혁신이 촉진되는 것도 일차적으로 리더십의 문제일 수 있다.

사실 혁신은 단기적으로는 가장 불가능할 것 같은 과제, 그렇지만 가장 필요한 과제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조직이라면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기를 꺼리게 되고 이 대목에서 리더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논지다. 특히 사회혁신은 시민들의 필요가 가장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해법으로 풀기 어려운 심각한 사회적 난제를 풀기 위한 도전이다. 때문에 여기에 도전하는 활동들은 가장 불가능할 것 같지만 가장 절박한, 문자 그대로의 ‘사회혁신 과제’이다.

참고문헌

리처드 탈러(Richard H. Thaler)지음, 박세연 옮김, 2015,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선택 (Misbehaving)』, 리더스 북, p 454 서울시, 2015.11, “2020청년정책 기본계획”

리처드 탈러(2015), pp 307~312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 Keynes)지음, 이주명 옮김, 1936,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이론』, 필맥, pp 193~194

사회혁신포커스

주차문제 해결, ‘주차장 공유’로 가능한가?

심은정 사회혁신리서치랩 연구원

공유도시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다양한 사업 시도는 2016년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수상을 가능하게 했다. 심사위원단은 서울이 ‘공유도시’를 개발하는 세계적 차원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서울이 세계 최초의 공유도시 중 하나라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을까? 공유도시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다양한 사업시도는 여러 분야에 걸쳐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가 주차와 관련된 혁신사례이다.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사례들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주차문제의 혁신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공간 공유’의 개념으로 환기되었고, 그 맥락과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서울시에서 추진한 주차 공간 공유사례이다. 서울시에서 주목한 주차공간은 바로 유희 주차 공간이었다. 특히 임대아파트 주차장의 유희공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다. 서울시의 주차 공간 공유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이루어진다. ‘서울주차정보’가 그것이다.

하지만,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주차장 공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여전히 주차문제로 몸살을 앓는다. 그렇다면,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는 ‘공유’의 개념이 오늘날 도시문제 혹은 사회문제의 열쇠라고 보기 어렵거나 특히 ‘주차장 공유’가 해결할 수 있는 주차문제는 온·오프라인이라는 플랫폼과 상관없이 제한적인 것일까?

‘주차장 공유’를 비교적 늦게 도입한 일본은 사실 불법주차 문제가 심하지 않은 나라로 유명하다. 일본은 주차장이 없이는 차를 살 수 없는 차고지 증명제를 지난 1962년부터 도입하였다. 일본에 ‘주차장 공유’가 한발 늦게 등장한 것은 차고지증명제임에도 불구하고 운동경기나 공연 시에 나타나는 만성적인 주차 공간 부족현상을 피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재까지 이루어진 주차 혁신의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특히 ‘공유’라는 개념은 기존의 제도와 결합되어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혹은 기존의 제도를 대체하는 제도가 자체로 만들어 질 수 있는지 현재로서 정답을 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적어도 한국과 일본, 두 나라만 비교 해봐도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주차장 공유’의 확대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다. 그렇다면, ‘주차장 공유’ 이전에 기존의 정책이 야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따라 정책이나 제도를 수정한다면, ‘주차장 공유’는 더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까.

서울시, ‘공유도시’로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수상

박원순 시장이 지난 4월 17일 2016년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을 수상했다.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여를 하거나 탁월한 성과를 낸 개인이나 조직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스웨덴 정치인, 기업인, 환경협회장 등이 심사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 올해의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주제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소유권 및 정보 제공을 공유하는 기회를 강조했는데, 심사위원단은 서울이 ‘공유도시’ 분야에서 세계적 차원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도시가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충분히 이용되지 않은 자원을 동원하고 시의 규정을 변경하는 등 자원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처럼 공유 경제는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도시문제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공유’라는 새로운 프레임 안에서 모색되고 있다.

서울이 세계 최초의 공유도시 중 하나라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을까? 현재 서울시는 공공정책의 혁신 외에도 서울주차정보 어플리케이션,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스페이스클라우드 서비스, 공공 무선인터넷, 열린데이터 광장 등 공간, 데이터 및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이와 같이 공유도시 서울은 스마트 플랫폼 등을 통해 자

원과 서비스 등을 공유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시민들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유’ 활동은 박원순 시장 취임 이듬해인 지난 2012년부터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다. 공유도시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다양한 사업시도는 2016년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수상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공유경제’는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정보 기술이 어떻게 스마트 플랫폼 혹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원과 서비스 등을 공유하고 여러 가지 자산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작업들은 천연 자원의 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더 많은 사용자들이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는 자원과 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을 넘어 환경오염이나 주차장 부족 문제와 같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유’를 공공정책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왔다. 예컨대, 2012년부터 서울시는 야간에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공유할 상가와 학교를 모집해 주차난을 해결하였고, 유희공간 소유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새로운 주차공간을 만드는 비용을 절약하는 등 생활밀착형 공유사업을 추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가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들로 서울시의 주차문제는 여전히 여전하다. 그렇다면,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많은 혁신사례들과 ‘주차장 공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차문제 혁신, 국내외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사례들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혁신사례들이 가진 문제의 식은 크게 주차 요금과 공간 문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주차 요금 문제는 공공장소 혹은 거리주차에서 크게 대두되는 문제이다. 같은 요금이면 개인이 가고자하는 목적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주차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 구역과 시간 그리고 요일별로 주차요금을 차별하는 정책이 도입되어 특정구역이나 시간대에 몰리는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많은 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요금 지불방법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화되었다.

다음으로 주차 공간의 문제이다. 한정된 공간에서의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를 독일에서는 발상의 전환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다. 기존의 나열식 주차가 아닌 엇갈림 주차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공간의 부족뿐만 아니라 공간을 찾기 위해 뱅뱅 도는 크루징(cruising)에 소요되는 시간과 에너지 낭비 문제는 센서를 이용한 빈 공간 표시라는 기술의 혁신을 이용해 해결하였다. 크루징은 에너지 이슈와 결부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에코 주차장이라는 개념도 생겨났다. 기존 주차타워에 사용되는 전기를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성한다거나 주차타워 외벽에 식물을 덮어 외관장식 및 단열기능을 보완하기도 했다. 주차타워와 관련하여 주차타워의 공간을 최대화하기 위한 설계방식이나 공간 활용의 문제 등이 결부되어 주차 공간 문제에 대한 혁신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왔다.

이처럼 주차문제의 혁신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해왔다.¹⁾

이런 맥락에서 주목해볼 사례는 바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주차문제 해결방법이다. 그동안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공간의 공유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주차 공간은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에 속하는 사례가 영국의 'JustPark'²⁾라는 온라인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의 기본적 기능은 목적지 부근의 주차 공간을 검색하여 알려주는 것이다. JustPark에 공유되어 있는 주차면은 공영, 유료, 개인 주차장을 모두 포함하여 15만여 개다. 이 중 2만 3천 개 정도의 공간이 개인이 공유하고 있는 주차 공간으로 공유경제의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

이와 비슷한 온라인 플랫폼이면서 조금은 성격이 다르게 탄생한 공유모델이 바로 독일의 소셜주차서비스, 'ParkTAG'³⁾이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이 서비스는 주차정보를 사용자끼리 공유하여, 사용자가 주차장을 떠날 때 다른 사람에게 알림을 보내 마치 배턴 터치하듯 자리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서비스는 무료 공영주차장 정보만을 공유한다. 무료 공영주차장이라는 공간에 한정되어있고, 정보를 공유하여 개인들에게서 수익을 얻으려는 경제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언급된 주차정보 온라인 플랫폼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각각의 플랫폼이 담고자 하는 철학은 차치하고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주차혁신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맞닥뜨리는 주차문제를 더 쉽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주었다.

서울시, 주차문제 해결 위한 제도부터 마련해야 한다.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이 주차문제에 대한 고민은 최근에 공간 공유의 개념으로 환기되었고, 그 맥락과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서울시에서 추진한 주차 공간 공유사례이다. 서울시에서 주목한 주차공간은 바로 유희 주차 공간이었다. 특히 임대아파트 주차장의 유희공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주차 공간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서울시가 약정한 유희 주차면은 220면인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배정하고 사용자가 소정의 주차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했다. 주차비는 해당 임대아파트의 관리비로 사용되어 주민들이 관리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 높은 평을 받았다. 실제 이 사업이 진행된 성북구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신설하지 않고 주차난을 해결하여 공영주차장 신설로 인해 소요될 세금이 절감되고 임대아파트 주민은 유희 주차공간을 공유함으로써 매달 관리비 5%가 절약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서울시의 주차 공간 공유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이루어진다. ‘서울주차정보’⁴⁾는 주차 공간 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앞서 언급된 영국의 ‘JustPark’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공유’가 혁신에서 간과할 수 없는 글로벌 트렌드이다 보니, 서울시에서도 주차문제를 공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공모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온·오프라인 ‘주차장 공유’를 시행하고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심의 주택가 골목이나 대로변에는 불법으로 주차된 차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차장 공유’가 해결할 수 있는 주차 문제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라는 플랫폼과 상관없이 제한적인 것일까? 여기서 연구해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불법주차 문제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나라로 유명한 일본이다.

최근 한국의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도쿄의 대표적인 변화가 긴자의 거리는 서울의 명동과 비슷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로 뒤엉킨 차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통행량이 많은 거리가 아닌 도쿄의 오래된 거주 지역에도 주택마다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있어 좁은 길에 불법으로 주정차 되어 있는 차는 보기 힘들었다.⁵⁾ 바로 주차장 없이 차를 살 수 없는 차고지증명제 때문이다.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는 지난 1962년부터 도입되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거주지 2km 내에 차고지를 확보하고 관할 경찰서에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즉, 자신의 차를 주거지 근처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차를 살 수 없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2007년 2월 제주도에서 전국 최초로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였다. 이후 2012년 1월부터 중형자동차, 2015년 1월부터는 소형자동차 등 신규 등록에 한 해 전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기반시설이 미흡하여 중형차는 2017년 1월, 소형차는 2022년 1월로 적용시기를 약 5년을 연장했다. 한국에서도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은 차고지증명제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에 좋은 방법임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운전 = 주차 공간 확보 선행’이라는 방법이 주차난을 완전히 해소하

고 있는 것은 아니다. 차고지증명제에도 불구하고 운동경기나 공연 시에 나타나는 만성적인 주차 공간 부족현상을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일본에서도 ‘주차장 공유’가 등장했다. 기본적으로 주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비교적 비싼 일본에서는 ‘주차장 공유’가 충분히 매력적인 ‘공유경제’모델인 것 같다. 하지만 일본이 단순히 기술이나 정보에서 뒤졌기 때문에 ‘주차장 공유모델’의 후발주자가 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제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도입된 일본의 주차장 공유’와 ‘제도가 포함시키지 못하는 부분을 대신하기 위한 주차장 공유’는 문제 해결의 방향이 다른 것이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한국과 일본의 ‘주차장 공유’의 개념이 같은 방식으로 주차문제를 해소한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주차 혁신의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특히 ‘공유’라는 개념이 기존의 제도와 결합되어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혹은 기존의 제도를 대체하는 제도 그 자체로 만들어 질 수 있는지 현재로서 정답을 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적어도 한국과 일본, 두 나라만 비교 해봐도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주차장 공유’의 확대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다. 그렇다면, ‘주차장 공유’ 이전에 기존의 정책이 야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따라 정책이나 제도를 수정한다면, ‘주차장 공유’는 더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지금 서울시가 ‘공유도시 서울’로 추진하는 ‘공유’사업은 관련 분야의 기존 정책과 제도가 선행되어야 다양한 도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공유’라는 혁신 방법들 혹은 기술

적인 측면을 넘는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만드는 혁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1) PublicWorks magazine (검색일:2016.04.20.)
<http://www.pwmag.com/traffic-control/the-10-most-innovative-parking-cities-in-the-us.aspx>
- 2) Business Insider UK (검색일: 2016.04.20)
<http://uk.businessinsider.com/london-startup-justpark-cutting-half-of-its-workforce-2015-11>
- 3) Tech Crunch (검색일: 2016.04.20)
<http://techcrunch.com/2013/04/29/disrupt-ny-startup-alley-park-tag/>
- 4) 서울시 홈페이지 (검색일: 2016.04.21)
<http://traffic.seoul.go.kr/archives/1869>
- 5) YTN (검색일: 2016.04.21)
http://www.ytn.co.kr/_ln/0103_201604090500069487

사회혁신과 사람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강신호 소장

에너지위기 시대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 “삶의 패러다임 전환이 곧 혁신이다.”

기후변화나 에너지위기와 관련된 환경문제는 한 국가나 특정 지역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는 자원이나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있어 큰 고민을 하지 않는다. 자원이나 에너지가 이미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고갈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에너지위기시대를 살고 있다. 이는 세계에너지협의회(WEC)가 발표한 에너지 3중고 지수(Energy Trilemma)를 통해 알 수 있다. 에너지 3중고란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형평, 환경 지속 가능성을 일컫는 말이다. 다시 말해 에너지는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어야 하며 보편적 접근성을 갖춰야 하고 환경에 미치는 피해도 적어야 지속 가능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129개국 중 54위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에너지안보(Energy Security)는 101위로 아시아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즉,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한국의 에너지안보 위기를 적극적

으로 대처하고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국내에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에너지 자립을 모토로 에너지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를 만나보았다. 에너지 절약이라는 기존의 소극적 차원을 넘어 에너지위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사회혁신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Q: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는 말 그대로 에너지 대안을 모색하고 삶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소입니다. 대안에너지라는 단어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대안에너지는 대체에너지와는 다른 성격으로 다른 말로는 재생에너지 혹은 지속가능에너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따라서 저희 연구소는 탈핵을 지향하고 생태적 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며, 기존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개선에 대해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태양광, 태양열, 풍력, 자기발전 시스템 등 에너지자립 시스템을 만들고 설치해서 운용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작업이 기술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이기 때문에, 대안에너지의 성능과 효율을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고민과 에너지 자립시스템에 대해 연구하고 그것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대안에너지 사업을 실천하기 위한 지역단위의 방안이 있으십니까?
혹은 지역특성에 맞게 다른 종류의 대안에너지가 준비되어 있나요?**

A: 당연히 지역에 따라 환경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끔 태양광이면 태양광, 바람이면 바람 등의 지리적 조건에 맞게 설치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발전의 양이 큰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가정용 소형발전기로는 풍력이나, 태양광전지 정도는 설치할 수 있어요. 다만, 한계점은 대안에너지가 발전할 수 있는 전기량이 한정적인 것이 제일 문제죠. 햇빛이나 바람의 양이 일정치 않아서 날씨에 좌우되어 발전량이 달라지니까요.

또한 풍력발전이나 태양광전지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은 실질적으로 도시 내에서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도시는 공동주택이나 높은 건물들로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을 나누어 쓰는 형태이기도 하고, 건물이 설게 될 때부터 대안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 사실이에요. 자기발전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의 문제 뿐 아니라 에너지자립이라는 것이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패

턴과도 맞지 않아 단기간에 에너지자립을 실현해 내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Q: 대안에너지 적용에서의 가장 큰 고민 혹은 국내적용의 정책적 한계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체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법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구 법령으로써 2004년에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바뀌었어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신에너지는 자연에너지와는 다른, 수소나 연료전지 및 석탄을 액화가스화 한 것 등 대부분이 대기업/대자본/첨단 기술력이 투입이 되어야 가능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는 폐기물을 소각해서 만들어지는 열과 전기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재생에너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이 만들어진 2005년 이후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13년 기준 2%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가 2020년까지 30~40%를 상회하는 목표를 잡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 고작 13.4%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저희 연구소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일하시는 많은 단체들에서 주장하고 있는 분산발전 시스템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분산발전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지역 내에서 이뤄지며, 부족할 시 계통전원을 이용하면 되므로 환경 친화적이고 일자리 창

출 및 재생에너지의 사용확대, 온실가스 저감 등 여러 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많죠.

반면에, 대형발전소에 의존하는 중앙발전시스템은 환경파괴와 송전탑 건설 등 사회적 기회비용이 증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발전소와 석탄 화력발전소를 더 짓겠다는 정부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정한 에너지 정책과 실제 발표하는 정부 계획이 서로 불일치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책자체를 한계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Q: 대안에너지와 관련된 좋은 사례로서 현장 조사가 필요한 이슈나 인터뷰 대상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례는 동작구의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이나 은평구의 은평전환마을 등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난 후 몇몇 엄마들이 모여서 아이들의 미래를 지속가능하게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시작한 것이 어린이 마을도서관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정마다 에너지 절약을 해보고 그 실적을 비교해보자 했던 것이 에너지 절약운동으로 전개가 되었고요. 2011년부터 시작된 것인데, 지금은 이 운동에 참여하는 회원가정도 늘고, 마을에 “에너지슈퍼마켓”도 생겼습니다. 성대골 마을이 국제적으로도 잘 알려진 에너지자립마을 운동의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은평전환마을의 경우는 영국의 전환마을에서

생활을 해본 활동가를 중심으로 전환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형태예요. 퍼머컬처와 도시농업, 먹거리, 사회적경제 등을 고민하는 공동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중심의 사회혁신 현장으로는, 서울에서는 성미산마을, 삼각산 재미난마을이 알려져 있고, 문경의 희양산 공동체, 충북 괴산의 눈비산마을 등이 떠오르네요.

Q: 대안에너지라는 키워드를 시민들에게 확산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A: 사회혁신 분야 중에서도 환경문제와 에너지 분야에서 말해보자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직면한 환경문제는 이제 에너지 절감 혹은 절약 차원에서 접근하는 소극적인 방식이 아닌 에너지 자립이라는 적극적인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에너지에 대한 시민의식의 변화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기존에 사용한 에너지 발전 원료의 고갈로 원자력이나 다른 대체에너지 물질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고 대체에너지 발전이 야기하는 환경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에너지를 절약해야한다는 시각보다는 지금까지 훼손된 환경이 인간사회에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연과 사람이 지구촌이라는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시각으로 에너지문제에 적극적인 시각이 현대사회의 에너지 문제에 대한 적절한 시민의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시각은 누군가가 한 순간에 깨닫는 게 아니라, 실제로 대안에너지를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안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살 수 있다는 각자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계속적으로 에너지자립과 관련된 성공사례들이 많아지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안에너지와 관련된 기술적인 지원 확산과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의식이 맞물려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국가의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을 규제하는 Top-down 형태의 환경문제 해결과는 다르게 자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단체로서 ‘사회혁신’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대안에너지 사업과 사회혁신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A: 사회혁신이란 가지적으로 보는 어떤 큰 변화라기보다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의식과 해결방안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모아지고 공유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적 문제는 지금까지 각자의 영역 안에서 그것을 발전시키는 형태로만 성장해왔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문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른 영역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성장된 산업들이 결국에는 기후환경 변화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말이죠. 이와 관련한 환경문제는 이제 각자 다른 영역들을 초월하여 공동으로 해결해야하고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혁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Q: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는 기존에 경북 문경에 위치하다가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혁신파크의 주요 운영 가치 중 하나는 공유인데요, 공유공간에 계신 입주단체의 입장에서 다른 입주단체와 어떠한 형태로든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A: 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입주단체들과는 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혁신파크에는 저희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와 같이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과 시민의 요구가 불일치하거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문제를 해소해주지 못 하는 부분을 자발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 혹은 문제의식을 가진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만 한정하여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혁신파크에 입주해 있는 NANCEN이라는 난민인권센터, 넥스트젠 코리아, 장남감 재활용기업 금자동이 등 다양한 분야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NANCEN과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와 난민인권이 서로 아주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아이디어적 차원에서 말해보자면,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와 NANCEN이 함께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과학의 기술적 혹은 이론적 교육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태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한 생태전환을 추구하는 단체들과도 이러한 교류를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네트워킹을 다른 영역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면, 사회혁신을 일구어낼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기대합니다.

Q: 사회혁신리서치랩은 사회혁신 관련 이론, 사례, 정책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리서치랩에서 어떤 연구를 수행하면 좋을까요? 혹은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와 리서치랩이 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사회혁신리서치랩이 현재 사회적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형태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혁신분야의 이론과 사례, 정책 등을 정리하고 사회혁신이란 분야를 시민들에게 더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작업도 해야겠지만, 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를 크게 던지는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사회혁신의 처음 시작은 문제를 인식 혹은 의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이슈를 진지하게 조명하는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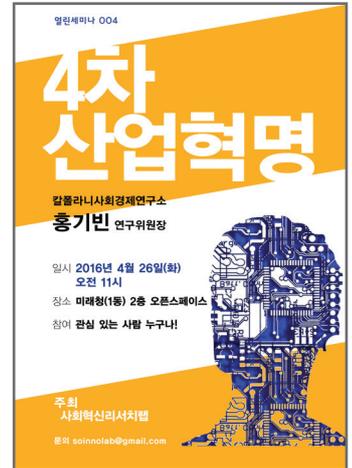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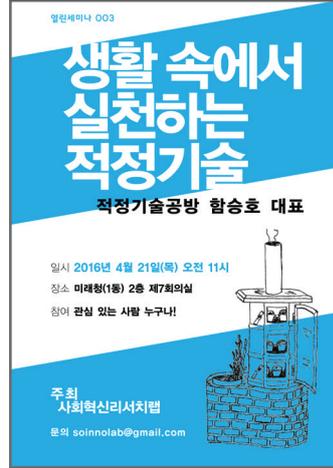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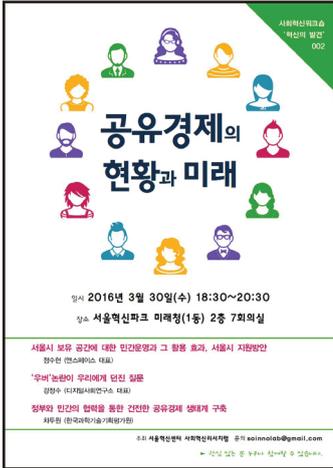
Q: 끝으로 사회혁신의 미래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질문이 애매한 것 같은데, 이 분야에서 느끼는 것은 사회혁신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회발전은 하나의 이벤트처

럼 단기간 안에 일어나는 형태는 아닐 것 같아요. 끊임없이 사회적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그것에 대해 해결하고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구조로 바뀌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회혁신의 미래는 밝다 나쁘다 평가할 문제도 시기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의 문명발달 과정이 초래한 인간사회의 문제는, 인문학적인 고찰과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학기술의 개발과 그 기술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부터 관심을 갖지 않으면, 현재 눈앞에 보이는 사회적 문제점들에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의 시대에 기존 삶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혁신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을 생각한다면, 자기만의 영역을 넘어 주변의 다른 문제들도 같이 봐야 하고, 경계를 넘나드는 공유가 이루어진다면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전환과 혁신은 용어만 다를 뿐 실제로는 같은 선상에 있는, 이 시대가 당면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바꾸려는 문화가 확산된다면 혁신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및 정리
심은정 사회혁신리서치랩 연구원



사회혁신워크숍 '혁신의 발견'

3회 프리랜서 권리와 외침-사업고용협동조합의 현황과 과제 2016년 4월 27일

- 발표1 : IT개발자 프리랜서의 일경험과 어려움 (오철 한국IT개발자협동조합 상임이사)
- 발표2 :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의 일경험과 어려움 (안상수 미디어콘텐츠창작자협동조합 사무국장)
- 발표3 : 프리랜서와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노력과 한계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발표4 : 프리랜서(개인 생산자) 협동조합 외국 사례 - 프랑스, 벨기에, 영국을 중심으로 (신순예 한국협동사회연대경제회의 사무국장, 프랑스 사회적경제 연구자)
- 발표5 : 프리랜서(개인 생산자) 협동조합, 도입과제와 전망 (서종식 일하는사람들의 협동조합연합회 시코파코리아 협동처장)

2회 공유경제의 현황과 미래 2016년 3월 30일

- 발표1 : '우버' 논란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 (강정수 디지털사회연구소 대표)
- 발표2 : 서울시 보유 공간에 대한 민간운영과 그 활용효과, 서울시 지원방안 (정수현 앤스페이스 대표)

1회 서울혁신센터 사회혁신리서치랩 개소 기념 워크숍 2016년 2월 24일

- 발표1 : 혁신활동가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사회혁신리서치랩의 살림살이 (김병권 사회혁신리서치랩 소장)
- 발표2 : 82개 입주단체, 파크살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임상렬 리서치혁신센터협동조합 이사장)
- 라운드테이블 : 함께 전망하는 2016년 사회혁신의 전망

열린세미나

- 4회_ 4차 산업혁명 (흥기빈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연구위원장) 2016년 4월 26일
- 3회_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적정기술 (함승호 적정기술공방 대표) 2016년 4월 21일
- 2회_ 린 방법론 사회혁신에 적용가능한가? (김병권 사회혁신리서치랩 소장) 2016년 4월 12일
- 1회_ 지식 공유 플랫폼 운영 사례 발표 (조희정 이화여대 경영연구소) 2016년 3월 28일

사회혁신리서치랩은 서울시로부터 서울혁신파크를 위탁 운영하는 서울혁신센터 산하 연구기관입니다.



“협치와 혁신”으로
행복도시를 꿈꾸는
서울시 사회혁신을 위해

사회혁신리서치랩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의제개발과 해답을 제시합니다.

사회혁신리서치랩은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 확산을 위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서울혁신센터

사회혁신리서치랩



Tel. 070-4771-0332

Fax. 02-389-7514

E-mail. soinnolab@gmail.com

Blog. http://blog.naver.com/innovation_lab

Facebook <http://www.facebook.com/seoulinnovationlab>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5번지) 미래청(1동) 313호